

말로만 상생... '불편한 형제' 광주시·전남도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언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사업들도 대부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동 발전기금 갈등 이어 복합혁신센터 건립 놓고 마찰 전남도 단독 예산안 편성...광주시 "광주 배제의도" 반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에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안도 편성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가 최근 공동발전 기금 관련 조례안을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데 이어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안도 편성하면서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복합혁신센터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 마련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지만, 전남도가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내년 예산안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예산 39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타당성용역과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490억원 중 국비 100억원을 뺀 390억원을 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전남도 예산으로 건립한 뒤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를 배제하고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며 반

발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 전남도와 나주시가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정작 '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 기관이 될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 빛가람동 199번지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설 복합혁신센터에 정부는 창업인큐베이터, 기업전시실, 산학연발전센터 등을 조성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과거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상생의 표본을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 본 정부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를 오는 2021년 완공, 바람직한 성공 모델로 전국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복합혁신센터의 예산 증액을 놓고도 또 한 차례 갈등을 빚었다. 예초 전체 예산 282억원 중 정부가 130억원을 부담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152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전남도의 요청으로 전체 예산이 490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증액된 490억원 중 338억원은 국비, 152억원은 시·도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국비 100억원, 시·도 부담 39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일정에 맞게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할 수 있는데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곳에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도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19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 모두 26명 규모로 설립된다. 하지만 전남도의 예산으로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시·도가 공동으로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짜겠다는 예초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발전기금하고 상관없는 국비 사업이며, 소유는 나주시"라면서 "혁신도시 기금조성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긴 했지만 광주시·광주시의회와 협의되지 않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증액된 490억원 중 338억원은 국비, 152억원은 시·도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국비 100억원, 시·도 부담 39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일정에 맞게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할 수 있는데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곳에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도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19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 모두 26명 규모로 설립된다. 하지만 전남도의 예산으로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시·도가 공동으로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짜겠다는 예초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발전기금하고 상관없는 국비 사업이며, 소유는 나주시"라면서 "혁신도시 기금조성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긴 했지만 광주시·광주시의회와 협의되지 않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정비 상한액 제한 풀었더니... 밥그릇 챙기기 바쁜 지방의원들

전남도의회 18%·나주 25% 의정비 발빠르게 인상

나주시의회 25%, 완도군의회·장성군의회 19%, 전남도의회 18%..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고삐가 풀렸다. 지난달 정부가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을 풀어주자마자 벌어진 현상(광주 일부 9월4일자 2면)이다. 경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밥상 쟁기에 나섰다.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의회와 전남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 올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의회는 내년 인상폭을 감안해 전국 평균 의정비를 5674만원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현재 3280만원인 월정수당을 594만원 인상해 3874만원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상 폭은 18%다.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해 전국 평균(5674만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해외연수비 의원 개인당 연 250만원을 더하면 연봉 5924만원이 될 전망이다.

시·군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더욱 꺼리낌이 없다. 나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25%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4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501만원 올려 2505만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하면 나주시의원 의정비는 3825만원이 된다.

장성군의회와 완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각각 19%씩 올려 2177만원과 2197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하면 의정비는 각

각 3497만원과 3150만원이다.
영광군의회는 월정수당 18%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2059만원이었던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4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9.5% 인상, 의정비를 3895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반면, 목포·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의회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2.6%)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는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을 이보다 낮은 2.5%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보다 0.1%포인트 낮다.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는 지방의회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한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들 의회는 월정수당이 수년간 인상되지 않아 인상폭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전남도의회는 6년째 의정비가 동결됐다"면서 "이로 인해 서울 강남·서초·종구의회와 경기 수원·성남·용인시의회 등 기초의회보다 월정수당이 적은 역

전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취약하고 경제 여건이 열악한 전남이 다른 시도처럼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성비하·막달·외유·도정질문 역사강의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겹쳐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

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000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정찬주의 유럽 예술기행
- 이탈리아 친퀘테레·시에나 ▶18면
김여울 기자 오카나와 캠프 가다
- 체인지업에 공들이는 박준표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kps.co.kr

"글로벌 발전플랜트 솔루션 Provider" 한전KPS!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전KPS!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VISION 2025